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구축방안

I. 서론

- 지난 2006년 1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되었고, 큰 틀에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짐
- 앞으로 2030년까지 진행될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은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면해 온 수도권 일극집중의 폐해를 불식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보면 당사자 입장에 있는 충청권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역주민으로서 중앙정부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여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충청권으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이념과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충청권이 스스로 국토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관점에서 지역개발과 도시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그리하여 충청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일원이 체계적으로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구사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과정을 보면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4년 동안 진행될 건설단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조성사업, 정부공공청사와 도로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행정중심복합도

시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관련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주민입주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최종목표 년도인 2030년에는 인구 50만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와 건설 목적이 다른 만큼 단순히 인구 50만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중추기관이 상당수 입지하는 만큼 신도시의 규모는 더 크게 잡아야 하지만, 인구 50만의 중급도시 규모를 선택한 것은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분업, 기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충청지역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자족성 방안을 살펴보고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함

II.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는 다음 4가지를 지향하는 도시로 건설될 예정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는 기본적으로 자족도시를 지향하되 충청권의 주변 도시(대전, 천안, 청주, 공주 등)들과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목표인구는 50만(2030년)이나, 이 인구의 충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단계별로 인구 증가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단계의 구분은 초기단계(~2011), 정책적 성숙단계(2012~2015),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 완성단계(2021~2030) 등으로 구분한다. 초기에는 정책적 추진력에 의하여 완성단계로 갈수록 도시의 자족적 경쟁력에 의하여 인구가 집중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 50만명의 구성을 보면 수도권 유입인구 30만, 충청권유입인구 10만, 비수도비충청권 유입인구 10만 명으로 가정하고 있다. 초기에는 정책적 추진력에 의하여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종사자 및 가족, 연관산업 등)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완성기에는 비수도권 및 비충청권으로부터의 유입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Ⅲ.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방안

- 지난 2006년 2월9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다. 즉 위계별로 보면 지역적 기능(Regional Net)으로 충청권 광역 중심도시 기능, 국토적 기능(National Net)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수용, 국제적 기능(Global Net)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글로벌 기능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두려고 하는 기능으로 광역유통, 대학·대학원, 문화·미디어, 중추행정, 첨단산업, 연구개발, 국제문화관광 등을 제안하고 있다<표 1>. 주변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떠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지역의 이해 없이 진행된다면 신도시 도입기능이 주변도시 기능과 상충되어 주변도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적절한 규모의 기능이 설정되지 않으면 효율성 확보가 어렵거나 신도시로의 기능적 흡수로 인한 주변도시의 공동화가 야기될 수도 있음

<표 1> 자족기능의 유형화

위계별 유형	내용	도입기능 (예)	
지역적기능 Regional Net	충청권 광역중심 도시기능	광역유통	고급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학,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원
		문화, 미디어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방송국 등,
국토적기능 National Net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기능 수용	중추행정	중앙행정청사
		첨단산업, 연구개발	첨단산업연구단지
국제적기능 Global Net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글로벌기능	국제문화관광	국제회의장, 컨벤션센터

자료: 국토연구원 주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 (2006년 2월9일).

- 자족기능을 위한 기능별 업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제조업 기능으로서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으로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기타 전기기계 및 전지 변화 장치, 영상 음향 통신 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산업용지로 약 25~35만평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예상 유발 고용은 17,00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에 충청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참여하고 분업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 2> 유치 제조업종

업 종	선택 근거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행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사무,계산,회계용기계	차세대 성장동력 첨단 산업 도시입지 업종
기타전기기계및전지변화장치 (차세대전지)	차세대 성장 동력 첨단 산업 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 수요증대
영상음향통신장비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성장 동력 첨단 산업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을 리드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차세대 성장 동력 첨단 산업 충청권 IT, BT 와 연계

자료: 국토연구원 주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2006년 2월9일).

-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는 외국 행정도시의 사례를 검토하고 수도권과 비교하여 충청권에 부족한 기능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산업도 충청권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상호 보완관계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산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예술·오락(문화산업)을 선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약 6~10만평의 비즈니스파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문화산업 부지 포함), 예상 유발 고용인구는 약 70,0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음

- 문화기능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한국을 상징하고 세계에 자랑할만한 박물관, 공연장, 전시관 등 대형 문화시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문화산업으로는 출판, 방송 등 행정기능과 관련 있거나 콘텐츠, 디자인 등 충청권 전략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문화산업을 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적극 유치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 클러스터 부지로 약 2~4만평, 예상 유발 고용인구로서 도시전체 인구의 1%인 5천명을 예상하고 있음
- 국제교류 기능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의 도시가 되기 위해, 또 충청권에 가장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교류 기능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교류 부지로 호텔, 쇼핑 등 관련 상업시설 포함하여 약 5만평을 상정하고 있고 컨벤션과 전시장만 고려시에는 약 1만평을 예상하고 있다. 문화 및 국제 교류 기능의 유치 전략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교류 기능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공공의 적극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의 선도투자를 통해 한국 대표시설 및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민간 역량 참여와 향후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민자유치 사업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 교육, 연구 기능으로 종합대학교와 전문대학원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신도시가 혁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조기에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년제 우수 종합대학교 1개소의 조기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 대안으로는 ①새로운 대학의 신설, ②충청권 대학의 이전, ③수도권 대학의 이전 등을 상정하고 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에 달려 있고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부지 공급 가격 등 인센티브 여부가 유치의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정착할 행정 기능의 교육 연구 측면을 지원할 관련 전문대학원이

나 대학원대학의 유치도 필요하고,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소 등과 교육 연구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종합대학교 1개소 및 전문대학원 2개소 부지를 위해 약 15~30만평이 소요되고 유발 고용효과는 800여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의료복지 기능으로는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선진 의료복지 시설과 아울러 선진 의료·복지 전달체계를 갖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도시 산업 측면에서도 의료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선진 의료·복지 시설 및 산업을 첨단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의료산업을 한데 묶은 의료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산업클러스터, 의료실버타운단지 등 약 10~30만평이 소요되고, 관련 유발 고용효과는 약 1만 3천명을 예상하고 있음
- 상업업무 기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충청권 거점 및 국제교류 기능을 할 광역중심 상업업무지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호텔, 고급백화점, 쇼핑몰 등 고급광역상권시설,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등 국제교류시설이 입주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를 위한 상업업무용지 전체 수요는 약 48만평으로 예상되고, 이 중 충청권 거점 역할을 할 광역중심 상업업무 용지는 약 8~12만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중심 상업지역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주할 경우 주변 지역의 상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리라 보며 주변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IV.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주변지역이 겪게 될 변화를 강병주 (2005)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우리나라 정치■행정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국가의 중심지역이 되고, 다음으로 인구가 유입하면서 현재의 농업 및 제조업 중심에서 수도권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게 될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증대, 교육의 질적 개선,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변화되는 충청권의 위상변화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강병주, 2005)

1. 국가의 행정기능 중심지역으로써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 공주·연기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대전 및 인근지역은 국가 중추행정기능의 강화로 인한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그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어 주변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교육, 문화, 오락, 주거기능을 지원할 것이며, 청주는 바이오 제품 및 항공산업 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천안은 반도체, 영상,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공주는 백제의 고도로써 전통을 보존하면서 도시개편이 진행되어 문화■휴양도시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는 위성도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논산, 예산 등은 광대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농산물을 비롯하여 1차 산업 상품의 유통시장이 형성될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주변의 대전, 청주, 천안과 더불어 광역·연계형으로 발전하여 현재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여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의정부 등이 연계형태로 발전된 현재 수도권과 비슷한 하나의 축소판이 만들어질 것임

2.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함으로써 발생될 산업구조의 변화로는 농업부문에서는 도시형 농업 및 상업적 농업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업은 고부가가치형 첨단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상업은 소비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고도화■다양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개별 상업주체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산업지원 서비스업과 행정수도의 회의■컨벤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업, 그리고 행정도시에서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여가 및 유흥서비스업도 크게 증가될 것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 농촌지역은 1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신규산업이 창출되고, 그로 인한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임

3. 교육의 질적 개선

-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충청지역은 교육 부문에서 질적·양적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의 인구유입 동기 가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인 바, 한 조사에 의하면 수능 5% 이내 학생의 62%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의 85%가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인지라,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각종 교육기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어질 것이다. 그 결과 충청권 전체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충청권 주민이 자녀교육을 위해 현재의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방은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어 오늘날처럼 인구 과밀화를 보이고 있는 바,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하게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에 대학이 새로이 입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도시에 입지한 대학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여건개선은 충청권의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키고, 외부지역으로부터 우수한 학생의 유치가 가능해지게 될

4.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결정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국내외로부터의 접근성인 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도로, 교통, 통신, 유통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대규모로 확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으로 주민의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현재의 주민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은 물론이고, 장래의 수요도 조사하여 시설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충청권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도시생활 편의시설이 제공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최첨단 복지 및 후생시설,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등이 확충되고, 이들 시설들이 지역 내에 적절히 배치되고,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시민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복지■후생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V. 충청권 지역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과의 네트워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인접지역의 공간구조 및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광역계획권 지정을 위하여 2005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역 도시계획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충청권 지자체 실무협의 등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하여 지난 2005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충청권 9개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결정하였다. 광역권 설정원칙으로는 광역권의 공간적 규모와 영향권, 광역도시계획 본래 취지에의 부합성, 3개 시·도간 공간 규모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광역계획권에 포함된 시 지역은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 등 5개 이고, 군 지역은 연기군,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등 5개 군임
- 우선 충청권의 인구를 살펴보면, 2002년 현재 충청권 인구는 약 484만명 수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2020년이 되면 약 44만명이 증가한 52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0~2030년까지는 인구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청권 인구 중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천안, 청주, 대전시의 인구가 246만명으로 충청권 전체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상당부분을 이들 3개 도시에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접지역인 공주시, 계룡시, 청원군, 연기군 등에서 인구증가가 현저하리라고 예상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산업 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진입이 어려운 민간 사업체의 경우 주변지역에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인구 증가도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반경 30km 권역 내에서 현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는 50만 명으로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광역권 인구는 예상보다 빨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표 3> 충청권 인구추이 전망

지 역	인 구(천명)			
	2000	2010	2020	2030
충청권	4,678.4	5,110.9	5,280.2	5,285.7
충청북도	1,466.1	1,562.0	1,583.5	1,563.0
충청남도	1,884.8	1,944.4	1,938.8	1,882.5
대전광역시	1,367.4	1,604.6	1,758.0	1,840.1
청주시	587.1	711.4	773.9	792.7
천안시	418.1	556.3	641.8	683.8
공주시	130.5	127.5	118.2	107.3
계룡시	27.0	38.0	45.1	48.8
청원군	115.6	172.3	198.3	214.3
연기군	80.0	79.0	73.5	66.6
진천군	57.6	62.4	65.8	68.3
증평균	29.3	26.2	22.5	19.1

자료 : 통계청(2003), 연령별(시도) 추계인구.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 약 65만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2030년의 충청권 전체인구는 약 594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대전, 청주,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1 대도시, 2 중도시의 충청권의 중심지체계는 계획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가됨으로써 1 대도시, 3 중도시의 공간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심도시별 성격과 기능분담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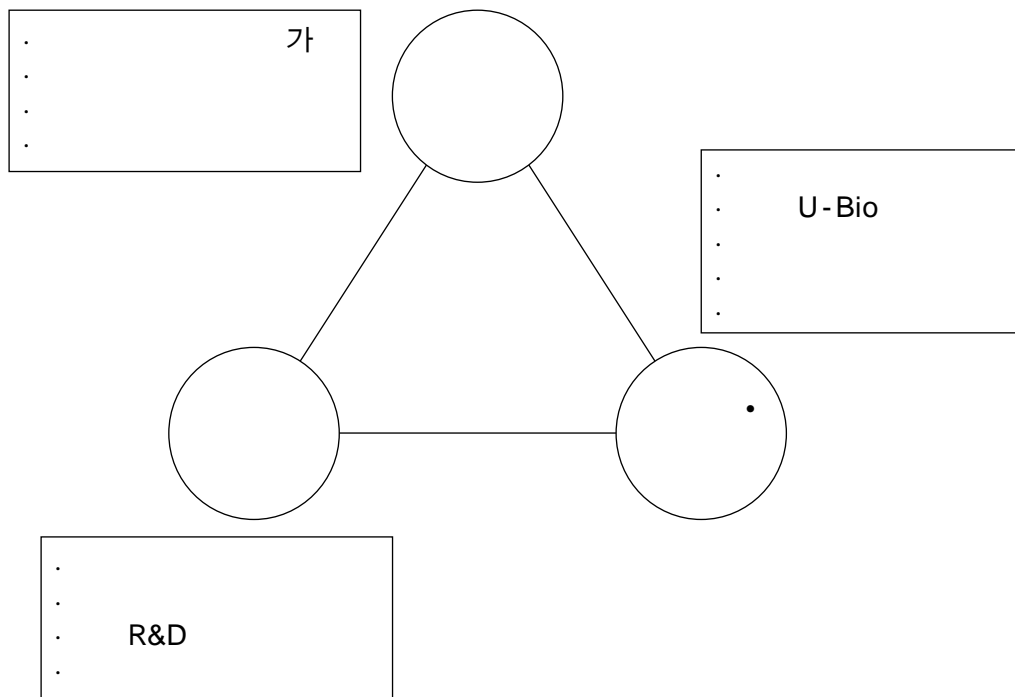
- 광역계획권으로 설정된 9개 시·군에 대하여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표 4> 도시지표(시 지역)

구 분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
면적(km ²)	539.64	153.32	636.45	940.90	60.68
인구(명)	1,438,778	606,305	445,485	133,012	31,430
가 구	479,916	201,444	151,536	45,146	10,165
대 학	16	4	11	3	-
종합병원	8	5	4	1	-
국가공단	대덕밸리	-	천안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	-	-
국보·보물	4	10	14	35	-
유통단지	2	-	1	-	-
호텔(특급)	3	건설중	-	-	-

<표 5> 도시지표(군 지역)

구 분	연기군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면적(km ²)	361.44	814.4	81.9	406.13
인구(명)	83,814	121,235	31,541	59,724
가 구	30,236	43,159	10,324	21,724
대 학	3	4	1	-
종합병원	3	-	-	-
국가공단	-	오송생명과학단지	-	-
국보·보물	2	4	-	1
유통단지	-	중부내륙화물기지	-	-
호텔(특급)	-	-	-	-



[그림 1] 주변도시 산업 연계도

자 료 : 이경기(2005), 주변도시 발전구상.

Ⅵ. 충남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응 방안과 네트워크 방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효과를 지역발전에 활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 이념과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충청권이 스스로 국토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관점에서 지역개발과 도시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 주변지역이 상호 보완적이고 분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충청권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광역계획을 마련해야 함

2.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관련 법률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 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 범위와 명칭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여야가 진행시키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이 때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는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부여를 논하게 될 때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큼
- 특히 연기군과 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권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 및 범위를 설정할 때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이 때 대응 가능한 논리를 미리 개발해 놓아야만 한다. 몇 가지 예상되는 대안으로, ①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정지」와 「주변

지역」만을 가지고 특정시를 만드는 방안, ②연기군 및 공주시를 통합하여 특정시를 만드는 방안, ③광역권 전체를 특정시로 만드는 방안, ④기존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여 특정시를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때 연기군 및 공주시 그리고 주변 지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임

- ①안으로 된다면 연기군의 많은 부분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편입되어 군세가 매우 약해지게 됨으로써 존립기반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천안시, 청원군, 공주시 등의 인접지역에 분산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②안으로 된다면 공주시와 같은 오랜 전통을 가진 도읍이 해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③안과 같이 된다면 상당히 큰 규모의 새로운 매머드 도시가 발생하게 된다. ④안의 경우는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주변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3. 광역계획권 관리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 도시로 하는 광역도시권이 새로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주변의 시·읍·면급 도시지역의 기존 시가지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으로 무질서한 건축과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된다. 광역계획권내의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정비방향을 중심도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주변 지역과 같이 이용하거나 연계되는 광역 차원의 도시 시설로 도로 등의 교통시설,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 자연공원, 유원지 등의 공원위락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 단계에 있거나 건설과정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도시 및 읍·면을 정비하거나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개발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시가지개발은 광역도시계획에서 먼저 충분히 검토하여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4.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도입하려고 하는 기능으로 광역유통, 대학·대학원, 문화·미디어, 중추행정, 첨단산업, 연구개발, 국제문화관광 등이 제안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떠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지역의 이해 없이 진행된다면 신도시 도입기능이 주변도시 기능과 상충되어 주변도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적절한 규모의 기능이 설정되지 않으면 효율성 확보가 어렵거나 신도시로의 기능적 흡수로 인한 주변도시의 공동화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에서 새로운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고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음

5.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광역중심 상업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충청권 거점 및 국제교류 기능을 할 광역중심 상업업무지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호텔, 고급백화점, 쇼펩몰 등 고급광역상권시설,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등 국제교류시설이 입주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광역중심

상업지역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주할 경우 주변 지역의 상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리라 보며 주변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업 환경을 가진 주변지역 특히 중소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권에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업시설 규모는 주변지역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주변지역 시장의 현대화와 전문화를 시급히 진행시켜야 할 것임

6.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변지역 대학의 참여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 중 교육, 연구 기능을 높이는 데에 주변지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선 교육 및 연구 기능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원을 유치하려는 데에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에 주변지역의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한 우수학생 유치는 연구 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오히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학으로 우수 인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제2의 강남」 또는 교육 특구가 되어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50만 이상의 인구 집중이 일어 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주대학과 충남대학의 통합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통합대학 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때 대학 명칭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명 또는 유사한 지명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전문대학원 또한 통합대학에서 대학원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문대학원은 개방형 대학원을 지향하여 전국에서 우수한 교수진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7. 충청권내 중심 도시간 네트워크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청권내 중심도시간 기능 및 시설분담, 소도시와 군 지역의 인구감소와 기능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전략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이 때 도시네트워크이론(City Network Theory)을 적용하여 도시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박재길·이왕건, 2004).
- 네트워크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도시는 시장규모가 크고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성장에는 유리하지만 에너지의 낭비적 사용과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의 집적 불경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규모 도시는 환경적 악영향이 낮고, 이동성이 높으며, 주민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규모와 인적 자원공급의 한계로 고차적 기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규모 도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중규모 도시의 규모와 중심성 취약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유사 규모 도시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대도시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임
- 충청권 도시들의 도시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우선 중심도시간 기능 전문화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중심도시들의 산업별 특성과 미래의 전략산업을 감안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화기능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도시들 간에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주변도시의 전문화와 네트워킹

- 주변지역의 전문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네트워킹은 자연·인문적 조건과 지역 특화 전략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

업연구원과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은 2004년 21세기 충남의 전략산업으로 전자·정보기기산업(첨단전자부품,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첨단운송장비, 정밀기기), 첨단문화산업(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서비스), 농·축산바이오(첨단작물, 첨단축산, 생물), 관광산업(생태체험, 건강·휴양)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음

-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은 수도권으로부터 분산되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고, 수도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구와 산업을 부분적으로 유치하기에 최적의 위치이다. 이미 천안은 현재 충청권 북부지역의 산업, 교육중심지로서 수도권과 대전권을 연결하는 서해안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청권 도시와의 연계기능을 보다 강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력산업인 금속기계업종 이외에도 충남도 주력 산업인 영상, 반도체, 정보통신업종을 적극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첨단화·다원화시켜야 할 것임
- 공주시는 교육·문화 산업, 관광·레저 산업,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전원형 주택 산업 등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을 활용한 수상 레저 산업을 개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광역시민의 레저 공간으로 서비스 할 수도 있음
- 계룡시는 국방 및 방위산업, 전원형 주택 산업을 전문화하고, 연기군은 물류산업,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신기술·첨단벤처산업, 오락·유흥 산업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곳에서 멀지 않은 부여군, 논산군, 금산군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화 방안이 필요하다. 부여는 백제역사·문화의 전통보전과 재현을 통한 문화관광산업, 청정농업을 전문화하고, 논산은 국방, 레저, 녹색관광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금산은 국제인삼물류센터 등 인삼약초 관련 산업 및 청정농업, 산촌·전원형 주거, 산악형 관광 산업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음

<표 6> 주변지역 산업전문화 방안

도시명	전문화 산업
행정중심복합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추정치·행정 ○ 교육, 연구 산업 ○ 첨단기업 투자지원시설 ○ 인쇄, 음향, 정보 산업 ○ 문화산업 및 의료·복지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및 연구(대학, 연구) ○ 정치·행정(제3청사), 국방 ○ 첨단산업 및 금융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통신관련 IT(산업) ○ 보건·의료·제약 등 BT(산업) ○ 항공산업, 음식료업, 인쇄출판업(산업) ○ 물류, 국제업무
천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산업)
공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문화 산업 ○ 관광·레저 산업 ○ 영상, 애니메이션 산업 ○ 전원형 주택 산업
계룡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방위산업 ○ 전원형 주택 산업
연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산업, 중부권내륙화물기지 ○ 신기술·첨단벤처산업 ○ 오락·유흥 산업

9. 환경 및 네트워크 산업 공동 대응

- 금강 중류지역에 인구 50만명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금강 하천의 오염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하류 지역인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청댐 상수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상수도 시설 용량을 늘리

고 배수관을 확보하는 등 네트워크형 시설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쓰레기 처리장, 열병합 발전 등 지역발전소 건설, 도시가스, 전력 등의 문제 등도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

10.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네트워킹을 위한 과제들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체제 확립(지자체간 협약, 조례제정, 위원회, 협의체 구성, 관련 지자체 및 실과 전담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
- 지역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계획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새로운 주변도시 기능 분담사업 발굴(이주자 택지 개발 사업, 휴양·레저·스포츠·오락 산업, 웰빙·건강산업 등)
- 제3차 충남 종합계획 수정
- 각 시군 도시계획 수정

참 고 문 헌

- 강병주(2003),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공동발전 방안”,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심포지움.
- 강병주(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대전의 지역혁신 전략.
- 강현수(2003), “지역혁신체계와 지역발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정책토론회」, 국가균형발전추진단.
- 건설교통부 등(200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 권용우(2004.12), “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지리학연구」 38(4), 한국지리교육학회.
- 권용우(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상생적 국토균형발전 전략, 제1차 신행정수도 포럼.
- 공주대학교(2003), 행정수도 이전 대책연구.
- 대전발전연구원 주최, 신행정도시의 지속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대전의 발전방안 정책세미나(2005. 3)
- 이경기·권용우(2004).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지리학연구」 38(3), 한국지리교육학회.
- 이창기(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대전의 위상, 신행정수도 포럼.
- 전명진·허재완(2003),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및 고용 파급효과,”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발제 논문」, 국토연구원.
- 정환영(2004),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디트뉴스 심포지엄.
-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00-202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대응 전략 세미나, 충북개발연구원 주관(2005. 4. 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홈페이지

(<http://www.macc.go.kr/>)